

배터리戰 완승했지만 LG ‘火들썩’... SK ‘안도의 미소’

‘LG 배터리 탑재’ 전기차서 화재 현대차 ‘코나EV’ 자발적 리콜 배터리 제품 이미지 타격 불가피 함께 탑재된 SK제품선 화재 안나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과 진행하던 ‘배터리전’에서 이겼지만,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에 웃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당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 연이어 불이 나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LG의 전기차배터리가 탑재된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쉐보레 볼트, 현대자동차의 코나EV 등은 최근 화재로 인해 자발적 리콜(시정조치)을 단행했다.

특히 현대차의 코나EV는 2018년 출시된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내 11건, 해외 4건 등 총 15차례의 불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화재 원인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오창공장.

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LG에너지솔루션의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불이 나기도 했다. 해당 사고 차량은 2019년 10월식 현대차의 ‘일렉시티’ 전기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기버스에는 코나EV와 마찬가지로 LG가 만든 배터리가 사용됐다. 주



SK이노베이션 서산 배터리 공장.

행 중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소방서, 현대차는 정비 내용과 배터리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문제는 책임 소재 여부다. 현대차와 LG는 화재 원인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LG가 코나EV의 리콜에 따른 배터리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리콜에 따라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

로 보고 있다. 하지만 LG는 현재까지 수천억 원의 총당금만 쏟아냈다는 전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리콜 규모도 글로벌 시장이 아닌 국내에서만 판매된 3만여 대로 한정하자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도 LG는 “배터리 셀 내부의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돼 내부 합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토부의 지적에 “현대차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셀 불량 원인이란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현대차는 당초 국토부에 코나EV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화재 원인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 양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이 진행 중인 코나EV 화재 원인 조사가 근시일 내 발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코나EV의 유럽 물량 일부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됐다. 하지만 LG와 달리 SK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LG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에 승소했지만, 배터리 제품 이미지에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올 對中 수출 반도체·화장품 중심 증가”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中, 내수 중심 본격 경기 회복세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확대 전망

올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이 화장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수입 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올해 8%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면서 수입 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1~2024년 중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25~35% 정도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경제가 적극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관계로 중국의 수입 수요 확대 여부는 국내경기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빠르게 늘어나며 아세안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일본에서 유럽연합(EU)으로 이동한 데 이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아세안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첨단소재 부품과 고급 소비재의 수입도 늘었다.

한은은 “원유, 철광석 등 기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원자재의 비중이 다소 하락한 반면 IT 기반 제조업 성장으로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반도체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보석, 패션,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 수입은 코로나

19 확산 이후로도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투자와 민간소비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됐고, 신인프라 확충에 따라 첨단소재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중장기적으로 내수중심 성장구조가 정착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GVC) 상 중국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중간재 자금급급망이 확대되는 등 대중국 수출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화장품 등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부품 소재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백화점은 ‘벌써 봄’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서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21S/S 봄 신상 의류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갤러리아가 직접 운영하는 해외 패션 브랜드 편집샵 ‘지스트리트494’에서는 봄 기운이 완연한 분홍색 원피스와 블라우스, 그리고 노란색 가디건과 니트 등 다양한 여성 의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

캐피탈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 4월부터 모범규준 시행
이사회에 정기적 보고 의무화
레버리지 배율 8배로 단계적 축소

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한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여전사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 리스크 변동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캐피탈사 등 비(非)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여전사가 가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금융위는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2022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낮춘다. 단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금감원, 소비자 권익침해 검사 대폭 확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목표
검사횟수 전년비 29.4% ↑

금융감독원에 올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잦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여부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히 검사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적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개선토록 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법규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 대상에 대해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축소할 이후의 ‘절벽호

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실희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도 점검한다.

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현장검사가 힘들 경우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실시하며, 원격·비대면 방식도 활용한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과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올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793회, 인원은 2만3630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80회(29.4%), 9444명(66.6%) 증가한 수치다.

종합검사는 올해 16회가 예고됐다.

/안상미 기자